

민주, 윤에 “고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입장 밝혀라” 맹공

이재명 “대통령 국민 통치자 아닌 대리인” 박광온 “국민 지켜보고 있다는 것 인식해야” 고민정 “대통령실 ‘사건 은폐·시간 벌기’ 의심”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수해 피해 실종자 수색 도중 순직한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둘러싼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공세를 펼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면서 “윤 대통령이 해병대원 사망 사건에 대해 사단장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회의에서 화를 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아침에 오면서 이 보도를 보고 제 눈을 의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면 사단장 할 사람 어딴냐라고 질책을 했다는 보도였다”며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사안에 대해서 진실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이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 관련 회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화를 내면서 사단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 질책한 것이 사실인지 반드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다. 온 국민

이 분노하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 국민 정서와는 완전히 상반된 대통령의 태도를 보고 국민들이 얼마나 절망할지, 탄식할지 참 답답하다”며 “반드시 진상을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도,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에 대해서도 입장 밝혀야 한다”며 “대통령은 국민을 지배하는 통치자가 아니라 국민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다른 지도부도 윤 대통령 비판에 가세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사단장이라는 자리가 아무리 중요해도 병사 한 사람의 목숨보다 더 중요할 수 없다”며 “이를 분명하게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 내용은 기존 언론에 배포된 문건에서 빠져 있는 내용”이라며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적극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대통령실의 언론 대응 태도와 태도들로 미뤄봤을 때 사건을 은폐하려는 것이

가 혹은 시간 벌기 위한 것인가, 지금 이 시각에도 어떤 문건을 또다시 작성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라고 꼬집었다.

변용일 기자

민주당, 여당에 오염수 방류 관련 공개토론 제안

“끝장토론이 정쟁의 시작 아닌 끝 되도록 힘 모아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총괄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투기! 여야 끝장 토론회 제안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규탄하며 국민의힘에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불안과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끝장토론이 정쟁

의 시작이 아닌 정쟁의 끝이 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대책위는 “원전 사고로 생긴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는 것은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아무리 과학적 검증은 거쳤다고 하더라도 불확실성에 기인한 불안감은 해소하기 쉽지 않다. 다핵종저체저설비(ALPS)가 걸러주지 못하는 방사성 물질에 대한 안전성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염수 방류에 대해 엇갈리는 평가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마실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하다는 전문가가 있는 반면 그 위험성을 우려하는 많은 전문가도 있다. 정부 입장을 같이 한다는 ‘과학’이라고 부르고, 정부 입장과 다른 건 ‘과감’이라고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강변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전까지는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이 지금과 같은 정쟁의 소재가 아니었다”며 “정권이 바뀌자 국민의힘 입장이 바뀌었다”고도 주장했다.

대책위는 “2021년 6월 29일 국회는 ‘일본 정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 규탄 및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을 여야가 합심해서 통과시켰다”며 “정권이 바뀌자 국민의힘 입장이 바뀐 것이지, 원전 오염수가 갑자기 안전해진 것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당 국회의원들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토론을 통해 안전성 평가, 정부대응 평가, 피해 지원책 등을 논의하자”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서로를 향한 선동, 괴담이라는 소모적 공방은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민의 불안과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에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이재명 대표, 금명 취임 1년 기자회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1년을 맞아 이번주 간담회를 열어 소회와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본인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와 리더십 위기, 거취 문제 등에 대해 언급할 지 주목된다. 또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전략과 비전 제시도 관심사다.

28일 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부터 1박2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민주당 워크숍에 참석한 뒤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30일 혹은 31일 개최를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28일 치러진 전당대회서 77.77%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됐으나 1년 내내 사법리스크에 발목이 잡혔다는 평가다.

지난 17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4번째 검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조만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5번째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 소환장이 날아들 때마다 계파 갈등은 격화했으며, 당내 일각에서는 비명(비이재명)

계를 중심으로 사퇴 요구도 나온다.

여기에 전당대회 문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논란, 김은경 혁신위원장 노인 폄하 발언 등 악재가 겹쳐 리더십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이날부터 강원도 원주에서 열리는 당 워크숍에서 이 대표 체제 유지 여부와 사법리스크 대응 방안 등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의원들의 발언이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비명계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지난 25일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지 않으면 거취를 결정할 의원들이 있을 것이다. 이 대표가 물러나야 분당도 막을 수 있다”며 이 대표 사퇴론까지 거론했다.

이 대표는 일단 사퇴를 요구하는 비명계의 주장엔 선을 그으며 내년 총선을 치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난 24일 TJB 대전방송에 출연해 “제가 78%라는 역사에 없는 압도적 지지로 당대표가 됐고 지금도 그 지지는 유지되는 정도를 넘어서 더 강화된다”고 말했다. 이어 “10월 사퇴 후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고 묻자 “전망이 아니라 그렇게 하길 바라는 기대일 것이다. 특히 여당이 그럴 것이고 그에 동조하는 일부 입장이 있을 수 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단합을 유지하고 지지자들과 당원들이 실망하거나 흩어지지 않게 해서 투표하게 하고 그걸 통해 내년 총선을 어떻게 해서든 반드시 이긴다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선욱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